

국제질서의 변화와 중국 대외전략에 대한 담론 검토: 중국 내부 논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애경 명지전문대학 중국어과

이 글의 목적은 국제질서 변화와 중국 대외전략에 대한 중국 내 논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질서와 중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매우 활발하게 토론된 바 있다. 이후에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면서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재차 논의의 지평이 넓어졌고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논조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G2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질서의 권력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중국의 국제적 역할과 발언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발전모델 확산과 관련한 학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중국의 발전모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미국이 신자유주의 모델을 전 세계에 천편일률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중국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이 신자유주의 모델 확산에 견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주제어 국제질서, 대외전략, 중국, 담론, 국가이익, 베이징 컨센서스

I. 도입말

이 글의 목적은 국제질서 변화와 중국 대외전략에 대한 중국 내 논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쇠퇴하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전제조건이긴 하지만 이는 다시 체제적 차원에서 국제질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부상은 1990년대부터 이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중국의 부상 자체보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중국의 대외전략의 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논의는 근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금세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중국 경제가 지

속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중국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논의는 중국의 부상이 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중국이 부상하면서 수행해야 할 국제적 역할까지 다양하다. 1990년대 초·중반 제기되기 시작한 ‘중국위협론’,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기된 ‘책임대국론’, 그리고 ‘화평굴기론’ 및 ‘베이징 컨센서스’ 또는 ‘중국 모델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G2’ 위상에 대한 논의 등이 모두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담론들이다.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담론들이 끊임없이 논의된 것과 맥을 같이해 2011년 미디어 분석 기업인 GLM(Global Language Monitor)도 200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인터넷, 블로그, 사회매체 사이트(social media sites)와 종이신문, 전자미디어 매체(electronic media sites) 등 7만 5000개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기사가 ‘중국의 부상(The rise of China)’이라는 결과를 보도했다. 이렇게 중국의 부상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줄곧 매우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임이 확실하다(Global Language Monitor, 2011/05/05).

중국의 부상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받을 뿐 아니라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고 평가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이자 세계 제2의 경제규모를 가진 강대국이다. 비록 중국의 1인당 GDP는 세계 98위(2010년 기준)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여기에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안보적 차원의 영향력까지 더해지면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Global Power)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은 무리가 아니다. 퓨리서치(Pew Research) 센터에서 조사한 세계 각국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2011년에 이 센터에서 진행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슈퍼 파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22개국 중 8개 국가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의 대답을 했고, 나머지 14개국 중에도 8개 국가에서 긍정의 대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부정의 대답을 한 응답자보다 많았다(Pew Research Center, 2011; 李少軍, 2012: 5-6).

이렇게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관심은 매우 높다. 그러나 중국 스스로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인식은 대외전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내부의 시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국제질서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중국 내부의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관련 담론이 형

성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지만, 중국 학자들이 대외전략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달리하는 자신의 관점을 자유롭게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기에, II장에서는 먼저 관련 담론이 형성된 배경을 고찰한다. 다음 III장과 IV장에서는 중국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변화된 국제질서에서 중국이 취해야 할 대외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살피고자 한다. 본문에서 고찰하는 논의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현재 시기까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를 진단하는 논의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III장과 IV장에서 중국 내 논의의 관점과 분석대상의 변화유무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III장과 IV장에서 소개하고 분석한 담론과 변화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II. 담론 형성의 배경

이론의 해석적 기능을 강조하고 현실을 설명, 해석하는 이론에 대한 서구의 이해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이론이 정책을 지도하는 사상으로서의 실천적 의미를 강조한다(Wang, 1994: 483; 王辑思, 1998: 295-317). 따라서 중국 학자들의 학술연구는 행위와 정책을 지도(guiding)하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들의 많은 연구들은 현상의 설명과 해석에 중점을 두기보다 주로 국가의 전략 또는 정책을 보완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대외전략과 관련하여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학자들 연구의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식적인 대외노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혹은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과 전략적 선택을 건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Wang, 2000: 477-479; 김애경, 2006).

1990년대 중·후반기 발생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와 주유고 중국대사관 피폭사건은 중국 학자들의 연구에 전환점이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수행해야 할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이 현실화된 결

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주유고 중국대사관 피폭사건은 단국패권질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다. 특히 1999년의 코소보사태와 중국대사관 피폭사건은 그동안 중국 학자들이 인식하던 단국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는 다른 차원에서 단국패권질서의 위험성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閻學通, 2005).¹ 결국 자연스럽게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다소 완화되었고, 학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9년 한 해는 중국 대내적으로도 특별한 한 해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대외전략에 대한 자체적 반성 및 검토를 제기하는 논문들도 다수 발표되었다(王逸舟, 1999a; 南方周末, 1999; 牛军, 1999). 또 그해 5월, 7월, 8월에는 대만 리덩후이(李登輝)의 ‘양국론’ 발언까지 겹쳐 중국 내 국제문제 전문가들에게 기존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결국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학자들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논의는 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 수행 및 대외전략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집중되었다(Goldstein, 2001: 84; 王逸舟, 1999b; 葉自成, 2000).

이렇게 시작된 중국 학계의 논의는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시 한번 중국 지식인들의 논의의 전환점이 되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집권한 후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화평굴기론(和平崛起論)’ 노선을 제기한 후와 2004년 라모(Joshua Cooper Ramo)가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를 제기한 후에도 관련 논쟁은 진행되었다. 당시의 논의는 화평굴기론이나 베이징 컨센서스의 의미와 그것이 중국의 위상에 걸맞은 개념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는 2000년 초반 시기로 국제질서의 권력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변화는 없었고,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국제적 지위가 점차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도 대외적으로 관련 이슈에 점진적으로 관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논의에서는 중국 학

¹ 코소보사태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탈냉전기 세계정치 변화의 분수령으로 간주했다. 그만큼 코소보사태와 주유고 중국대사관 피폭사건은 중국 학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왕푸춘(王福春)은 코소보전쟁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시기를 춘추시기, 그 이후의 시기를 전국시기로 비유하기도 하였다(王福春, 1999).

자들의 논조 변화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힘을 감소시켜 패권국의 쇠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미국의 쇠퇴는 중국의 상대적 부상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동안 가능성만을 근거로 제시되었던 국제질서 변화의 시나리오가 현실에 더 근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었고, 중국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국제질서의 변화와 중국의 대외전략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국 내부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III장과 IV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I.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중국 내 논의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중국 내 논의는 다음 네 가지 — 국제환경, 국제질서의 권력구조(國際格局), 국제관계이론과 중국학과 및 중국의 위상 — 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소보사태와 리덩후이의 ‘양국론’ 발언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중국이 견지해 오던 ‘평화와 발전’의 시대라는 시대관(時代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중국에게 시대관이란 중국이 처한 국제환경을 의미하며 시대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외교전략 수립의 전제조건이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의 시대관에 대한 인식은 대외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시대관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질서의 권력구조, 국제관계이론과 중국학과 및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그들의 논의를 살펴보자 한다.

1. 시대관

먼저 국제환경에 대한 논의다. 일반적으로 중국 학자들이 국제질서와 전략을 논할 때는 시대적 특징, 즉 시대관을 먼저 판단한다. 시대관이란 중국식 패러다임(paradigm, 範式)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논의되는 시대관이란 현 시대와 국제

정세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판단으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주요 근거이자 동시에 국제문제를 관찰하고 처리하는 출발점으로 간주된다(何方, 2000: 22; 冯昭奎, 2000: 12; 张睿壮, 2001: 20). 대외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인식과 틀을 제공하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보고문건에서 외교부문에 대한 입장을 명시할 때 시대관에 대한 판단을 가장 먼저 명시하고 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대외전략이 그토록 상이했던 것도 그들의 시대관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중반까지 시대관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목소리는 다양했다. 즉, ‘평화와 발전’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라는 주장에 찬반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중도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었다. 이런 시각들을 예를 들어 보자면 우선 탈냉전기 지역 차원에서 여전히 국지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세계적 차원의 전쟁은 발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 각국의 주요관심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각이 하나다. 그리고 평화와 발전이 전 인류의 보편적 바람이지만, 여전히 요원하다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으며, 서구세계가 주도하는 평화와 발전은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정된 시대관을 견지하는 것보다 변화를 잘 관찰하며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타났다(김애경, 2006).

중국 내 정책입안자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1980년대 이후 줄곧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관을 견지해 왔다. ‘평화와 발전’ 시대관은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세계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마오쩌둥의 견해를 수정하고, “평화와 발전은 당대 세계의 두 가지 주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鄧小平, 1993: 56, 96, 104, 233, 281). 이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제13차, 14차, 15차 보고문건과 16차 당대표대회 보고문건에서 ‘평화와 발전은 시대적 주제’라는 표현으로 재차 확인함으로써, 전문가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코소보사태와 주유고 중국대사관 피폭사건 이후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덩샤오핑의 시대관을 부정하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는 기존의 ‘평화와 발전은 이 시대의 양대 주제다’라는 명제의 시비에 관한 토론을 유발시켰던 것이다(김애경, 2006).

시대관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이전과 유사한 논조로 논의되고 있었다. 시대관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현재에도 모두 시대관이 중국의 부상에 유리한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학자들은 여전히 평화와 발전의 시대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촉구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張輝, 2010; 王輯思, 2012). 더불어 21세기 첫 20년은 더더욱 평화와 발전의 시대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張輝, 2010: 201). 이는 2002년 제16차 당대회 보고에서 21세기의 첫 20년이 중국에게 매우 ‘전략적 기회의 시기(戰略機遇期)’임을 명시하며, 중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 기간을 반드시 잘 이용하여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임을 강조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중국공산당 제16차 당대회 보고, 2002/11/8).

2. 국제질서의 권력구조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중국 학자들이 국제격국(國際格局)으로 표현하는 국제질서의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이다. 중국은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권력구조가 다극화로 발전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는데, 이는 1990년 덩샤오핑 발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鄧小平, 1993: 353). 다극화가 실현된 국제질서는 미국의 단일 패권질서가 중국에게 줄 수 있는 불리한 영향과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코소보사태를 계기로 다극화 추세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당시 국제질서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주로 당시의 객관적 권력구조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다극화는 객관적인 추세이지만 다극화의 실현이 원래의 예측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시각과(高世軍, 1999; 陳德照, 2000: 61-64; 王昶生, 2000) 거대한 슈퍼 파워와 여러 강대국이 공존하는 일초다강(一超多強) 구조임을 강조하는 시각(葉自成, 1999; 2000; 俞邃, 1999), 다강이 될 수 있는 국가들도 미국의 속박을 받게 되면서 다극화의 맹아(萌芽)마저 압살됨으로써 이미 단극 패권질서 체제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李義虎, 1999: 16-21).

국제질서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리더 역할에 대한 재평가로 변화하였다. 국제질서의 다극구조가 이미 구축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하지는 않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미국의 리더 역할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세계 권력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즉, 중국과 기타 강대국들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이 비록 최강의 '일극'이긴 하지만 국제적 이슈를 독자적으로 주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鄭永年·翁翠芬, 2010: 95).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단극 패권질서가 쇠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 근거로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하강하고 있다는 점, 다른 강대국, 중소국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32%에서 2008년 23.4%까지 하강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나 기후온난화 문제를 처리하는데 G7 국가보다 G20 국가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BRICs 국가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비확산의 문제와 반테러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이전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焦世新·周建明, 2011: 139).

더욱 흥미로운 점은 쇠락하는 패권국 미국의 행태가 국제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현 패권국인 미국이 중국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고취시켜 아시아 공동체 결성을 위한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중국의 영토문제에서 중국과 이 지역 국가들과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중국에 대해 견제와 균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王義桅, 2011: 14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부상국과 기존 패권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오히려 부상국의 위협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 이론들은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해 보면 쇠락하는 패권국 미국의 책임감 없는 행태가 부상국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국제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또한 과도하게 신흥 강대국의 도전성만을 강조하며 기존 패권국이 국력이 하강되는 과정에서 현 질서의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였다(焦世新·周建明, 2011: 140-146). 또 중국과 같은 부상국에 대해 미국이 취하는 견제나 비판에 대해 미국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권국 미국에 대한 비판은 새롭지는 않다. 그동안 중국은 내내 미국의 패권

행태를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그 논조가 바뀌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전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패권주의’ 또는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쇠퇴하는 패권국인 미국이 현 국제질서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고, 동시에 현재의 국제관계이론은 이러한 패권국의 위협성보다는 부상국의 위협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제고되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부상 과정에서 얻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楚樹龍, 2012).

3. 국제관계이론과 중국학파

서구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비판 역시 새롭지 않다. 중국 학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 국제관계이론이 국제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는 중국 내 국제정치학계에서 중국적 시각을 반영하는 중국학파 수립에 대한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관계이론의 중국학파(이하 중국학파로 약칭)는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에 대해 중국의 국정(國情)과 국제환경 및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중국인의 시각과 독자적인 견해의 이론화를 주장한다. 중국학파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었던 ‘중국특색의 국제정치이론’ 수립에서부터 시작되며, 현재는 ‘전통파’, ‘중국학파’ 등 다양한 제법으로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다(石斌, 2006). 초기의 논의가 ‘중국특색’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로 분류되었다면, 최근에는 국제관계이론에 중국적 시각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중국학파가 이미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서구의 국제관계이론이 설명해 내지 못하는 부분에 중국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학자들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학파 수립의 필연성과 수립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낙관적이다. 현재 통용되는 국제관계이론이 서구 주도적 정치문화이념을 체현하고 있어 변화하는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중국학파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국제관계이론은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미국인들의 기억을 담고 있으므로 많은 국제관계이론의 핵심은 미국의 패권과 패권체제 유지다. 사회과학 연구의 일환인 국제관계이론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규율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이론으로는 중국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학과 수립을 주장하는 진영이 내세우는 논리다(秦亞青, 2006; 王帆, 2008; 楊潔勉, 2012). 중국의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중국학과 수립에 낙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앞서 밝혔듯이 중국학파의 수립과 관련된 논의는 1980년대 후반 시작돼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학파의 수립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 중국학과 수립과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어떤 이론으로서의 체계적 틀이 제시되거나 수립되지는 않았다(王帆, 2008: 52). 다만 관련 전문가들이 산발적으로 중국학파가 염두에 두어야 할 주안점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중국학과 수립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친야칭(秦亞青)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중국학파의 사상적·이념적 연원(淵源)과 실천적 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秦亞青, 2005; 2006). 즉, “서구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이 흡스에 그 사상적 연원을 두고, 제1·2차 세계대전 전후 현실과 냉전기간의 국제관계 현실에 실천적 연원을 두며, 자유주의는 로크·칸트,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국제관계 실천에 사상적, 실천적 연원을 두고” 있듯이, 중국학파는 다음 세 가지 사상적, 실천적 연원에 근거하여 중국의 집단적 경험을 체현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유교문화의 ‘천하관(天下觀)’과 ‘조공체제’이다. ‘천하관’과 ‘조공체제’의 실질은 계서질서이다. 조공체제는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 or inter-state system)가 아닌 세계체제(world system)로서, 세계는 총체로서 흡스적 특징을 가진, 제국이 입립하는 전장(戰場)이 아닌 계서가 있는 체제이다. 이러한 계서체제의 운용규범은 ‘예(禮)’였고, ‘예’의 핵심은 ‘인(仁)’이었다.² 바로 이런 중국인들의 경험이 서구의

² 중국학파의 사상적 연원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예즈칭(葉自成)의 저서를 참고할

국제체제 이념과는 구별될 수 있는 중국학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근대주권사상과 혁명의 실천이다. 근대시기 중국이 서구 국가들에 의해 개방이 강요되면서, 중국은 정체성 확인 작업을 위한 끊임없는 혁명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중국인들의 ‘국(國)’ 개념과 다른 서구 국가들의 주권개념을 학습하게 되었고, 결국 계서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므로 혁명의 경험과 주권개념은 중국학파의 중요한 핵심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개혁개방사상과 국제사회와의 융합(融入)의 실천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을 국제사회에 융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인식에 변화를 주었다. 즉, 개혁개방은 중국이 근대 이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던 서구 국제체제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었다. 물론 현재에도 여전히 적응(磨合)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평화로운 융합을 성공하느냐는 국제관계이론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하는 관건이자 중국학파의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국제관계이론의 ‘중국학파’ 수립에 대한 논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제관계이론으로는 중국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중국의 고대철학 사상과 역사에서 이론적 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와 작업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논의와 작업들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제관계이론에 있어 기존 서구이론의 공헌을 전면 부인하며 새로운 틀의 수립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점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주장과 유사하다.

4. 중국의 국제적 위상

중국 학자들은 국제질서의 권력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신중하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학자들 간의 편차가 존

수 있다(葉自成, 2003).

재했지만 중국이 불완전한 극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였다(郭树永, 1999; 庞中英, 2000; 葉自成, 200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자국이 완전한 강대국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평가하는 G2의 개념이 제기되었다.³ 중국 학자들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G20 런던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와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의 만남을 후진타오(胡锦涛)의 후(胡)와 오바마의 중문명인 아오바마(奧巴馬)의 아오(奧)를 따 ‘후아오후이(胡奧會)’로 묘사하거나, 중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태도변화에 대한 외신보도를 인용하여 ‘G2(兩國集團)’나 ‘차이메리카(Chimerica, 中美國)’ 등의 용어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중국의 발언권이 확대되었음을 보도하였다(中國經濟時報, 2007/4/7; 唐學鵬, 2009; 環球時報, 2009/7/28). 물론 중국의 위상변화에 대한 중국 국내외 보도에 경계와 자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즉,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G2 국가로 규정하는 데 대한 득과 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瞭望, 2009/3/14; 沈丁立, 2009).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듯하다. G2의 개념에는 두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며 적대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식한다(張志剛, 2012). 따라서 중국의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은 2012년 중·미 간 제4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대립적이고 불균형 관계가 강조되는 주요 2개국의 개념인 Group2를 대신하여 대등과 협력적 관계를 의미하는 C2(Coordination과 Cooperation, Community)의 개념을 제기하였다. G2와 C2의 차이에 대한 중국의 설명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C2는 양국관계의 발전, 지역(regional) 차원과 세계(global) 차원의 이슈에서 양국이 신뢰증진을 통해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吳挺, 2012).

³ 워싱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프레드 버그스틴(Fred Bergsten)이 미국은 중국과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켜 전 세계 경제의 공동관리를 실현시켜야 한다며 공식으로 중·미 공동 관리(governance)를 제기한 바 있다(Bergsten, 2008). 또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과 린이푸(林毅夫)는 G20 런던정상회의 이전에 중·미 양국은 G20의 엔진이 될 것이며, 강력한 G2가 없으면 실망할 것이라며 G2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Zoellick and Lin, 2009/3/6). 반면 양국은 이해관계, 가치, 능력 등 차이가 너무 커서 양국의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G2시대라는 것은 신기루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Economy and Segal, 2009).

중국은 공식적으로 자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한다. 국제질서의 권력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중국은 부상하는 강대국이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 규모로 보면 중국은 이미 강대국이지만 1인당 GDP와 발전지수를 지표로 하여 평가해 보면 여전히 선진국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위상은 중국외교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중국이 기이한 슈퍼 파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서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기도 한다(李少軍, 2012: 6-7).

IV. 중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논의

1. 중국의 역할과 발언권 확대

국제질서의 권력구조 변화와 중국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국제질서의 권력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중국의 위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신중하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도광양희(韬光养晦) 전략과 책임대국(負責任的大國)에 대한 논쟁의 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당시에는 논의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만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대국론과, 국제사회에서 제한적인 책임을 수행하며 중국의 실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도광양희파, 중국의 이중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발전, 주권, 책임’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중도파 및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건의하는 부류 등이 존재했다(김애경, 2006).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단, 이전의 논의가 중국의 발전 또는 강대국화만을 고려했던 것이라면, 최근의

논의는 중국의 이익뿐 아니라 중국과 국제체제의 관계 또는 국제질서 속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확실히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켰는데, 이는 중국의 발전과 미국 및 기타 서구 강대국들의 상대적 쇠퇴라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학자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상대적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두고 벌이는 중국 학계의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중국학파(中國學派)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중국에게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부과하여 중국의 국내경제 건설을 방해하려는 서구 국가들의 음모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전히 주류적 입장은 아니지만 그 세(勢)가 넓어지고 있는 전통주의학파(傳統主義學派)는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Yan, 2011a; 2011b; 閻學通, 2011/5/5)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당시 중국의 외교적 행태는 논쟁의 양 극단 시각의 중간점 정도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이후 중국의 외교노선의 향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당시와 현재의 중국 경제력 및 국제적 위상은 확실히 상이하기 때문에, 당시의 논의가 다소 피상적이며 규범적 색채를 띠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논의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체제적 차원에서 중국의 발언권 확대에 대한 논의나 중국의 발전경험 또는 발전모델의 확산에 대한 논의들은 좋은 예다. 이처럼 체제적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강대국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증거로 여겨진다.

체제적 차원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물론 중국은 부상하는 과정에서 국제질서를 자국의 발전과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시켜야 한다고 인식해 왔다. 중국은 실제로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임승차(free-riding)’ 또는 ‘최대/최소 전략(maxi/mini strategy)’을 취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Kim, 1994), 냉전시기부터 줄곧 현 국제질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국제질

서의 구축을 주장함으로써 중국은 현상변경국가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중국은 중국의 부상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화평굴기론(和平崛起論)’을 주장하며 체제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중국이 아직 새로운 질서를 위한 제도와 규범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 때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현 시스템에서 중국은 발언권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梁凱音, 2009; 王嘯, 2010) 기존의 국제질서가 미국이 독점하는 구도였고, 미국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제질서 재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책임의 형태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중국도 일정 정도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제도와 규범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程曉勇, 2012: 13-14; 宋泓, 2011: 140-142).

다시 말하면 체제적 차원의 제도와 규범의 재구축과정에서 중국이 발언권을 확대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점진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재 체제적 차원에서 대조정과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중국도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 현재는 많은 경제, 정치적 차원의 시스템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강대국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중국의 종합국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됨으로써 국제지위가 더욱 제고되면 비서구 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발언권도 따라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 간의 갈등과 적응이 반복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宋泓, 2011). 이렇게 점진적인 발언권 및 영향력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국제적으로 감수해야 할 역할과 비용이 적지 않으며, 국내적으로도 1인당 국민소득, 국내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해결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중국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발언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 차원에서 경제주도권 다지기와 IMF에서의 중국 쿼터 늘리는 좋은 예이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국의 인민폐 국제화 시도, 주변 국가와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공동 통화 또는 통화조직 창설을 도모

하면서 지지기반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실제 행태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강대국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시각과 일치한다. 또 IMF에서 중국은 미국의 거부권을 제한할 만큼의 개혁방안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지만 IMF 출자금액을 증대시키고 자국의 쿼터를 늘리면서 의결권 조정에 합의를 도출시켰다. 경제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sm)는 공존하는 국제경제질서의 보편적 추세이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는 중국이 지역 차원에서 경제 주도권 다지기 노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에 대한 지렛대(leverage) 역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발언권 확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화폐시스템 개혁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소프트 파워 증강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 방안, 중국의 부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국제관계 이론체계 수립 방안 및 국제사회에 공공재 제공을 고려하는 방법 등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중국 정부가 인민폐 국제화의 속도를 적당히 늘려가는 방안을 통해 국제화폐시스템 개혁과정에서 발언권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는 이미 부분적으로 인민폐의 국제화를 시행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러시아와 석유무역 대금의 인민폐 결제 합의, 홍콩과의 무역대금의 인민폐로의 결제 합의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국제화폐시스템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이 인민폐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켜 인민폐가 점차 경제통화와 비축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은 주변지역 국가와 수출입 무역대금의 인민폐 결산 등의 방식으로 시작하여 지역을 점차 확대시키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한다(牛鐵航, 2009: 10-11; 蔡珞珈, 2010: 82).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를 증강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시키려면 문화적 차원의 힘을 포함한 소프트 파워를 증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중국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파워 증강을 위한 투자

증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은 문화산업에 GDP의 10% 정도를 투자하고 미국은 25%를 투자하는데 중국은 겨우 4%를 투자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제2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비중임을 지적하고 있다(張國祚, 2011).

이외에도 국제질서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서구 중심적 학풍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1990년대 말 미국은 ‘중국은 책임감 있는 부상국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중국에 대한 서구의 전략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중국은 서구의 논리를 따라 가며 ‘화평굴기론(和平崛起論)’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중국도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연구하여 국제관계이론 구축에서도 발언권을 확대하도록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焦世新·周建明, 2011: 140-146). 중국 학자들의 이와 같은 지적은 중국의 역할 또는 중국의 발언권 확대를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 차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국제관계이론들은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의 행태를 설명하고 해석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고전사상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이익을 반영한 이론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기존 논의와 다소 차별성을 보이지만 국제사회에 공공재 제공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가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보다 창조적으로 국제 이슈에 개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권이 미치는 물리적 국경을 넘어 뉴프론티어(New Frontier) 개념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심해 자원, 대양과 극지 및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중국이 국제수역에 등대를 건조하거나 세계적 차원의 소방대와 구조대원을 충당하거나, 해적 퇴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재 제공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다(王逸舟, 2012).

2. 중국 모델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성공하면서 중국의 발전 모델 또는 경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였고, 금융위기는 중국 모델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물론 발전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중국은 암묵적으로 동아시아 모델의 발전 경험을 추종했지만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보며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라모가 제기한 베이징 컨센서스는 논의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김애경, 2010).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 제기되었고, 이후 중국 국내외의 언론과 학자들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분석이 이어졌다. 베이징 컨센서스를 보는 중국 학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복잡해 보였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중국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여타 국가와 학자들은 중국 내의 논의가 팔목상대하게 진전할 것이라고 고무되긴 했으나, 중국 학자들은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이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확산하듯이 베이징 컨센서스를 대외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鄒東濤, 2006; 田春生, 2006; 劉延棠, 2007; 衛楊春, 2007).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용어보다 중국의 발전 경험에 중국 모델(中國模式)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었으며(俞可平, 2006), 라모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중국의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다(龐中英, 2004).

반면 베이징 컨센서스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부류들도 있었다. 즉, 베이징 컨센서스가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한다는 라모의 주장에 찬성하며 전 세계가 중국 열풍에 빠질 수 있는 계기이므로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張劍荊, 2004; 趙曉, 2004)와 베이징 컨센서스가 중국의 개혁과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은 아니지만 서구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춰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혁신적인 발전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

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시사점(啓示)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王建輝, 2005; 朱耀斌, 2006; 王廣謙,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과 워싱턴 컨센서스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베이징 컨센서스는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은 점진적 개방을 통한 발전을 시도하였는데, 근 30여 년간 9~10%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러한 발전방식과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세계 각국이 중국처럼 운영된다면 금융위기는 보다 빨리 끝날 것이다. 신속하고 단호하며 효과 있는 정책은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시스템의 우월성이 드러난다. … 재정부와 중앙은행에 권력을 부여하여 시스템의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국 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의 발언과 충고는 중국이 추구해 오던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장점을 피력하였다. 게다가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도 중국 모델이 개발도상국들의 해답이라고 주장하듯이 중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확실히 개발도상국들의 관심대상이 되었다(Kurlantzick, 2007: 135; Kitissou, 2007; 賀文萍, 2006: 19-20).

이와 같은 현상은 베이징 컨센서스 또는 중국 모델에 대한 중국 학계는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베이징 컨센서스 또는 중국의 발전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방문외교와 원조와 투자 증대, 교역의 확대 등을 소프트 파워 증대의 일환으로 삼아 중국의 발전 경험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Thompson, 2005; Kurlantzick, 2007; 기획재정부, 2009). 단편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될 수는 있겠으나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발전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학자들의 평가도 중국이 베이징 컨센서스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鄒東濤, 2006; 田春生, 2006; 劉延棠, 2007; 衛楊春, 2007). 뿐만 아니라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라모의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발전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어 중국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중국의 발전 경험을

베이징 컨센서스로 부르기도 하는 중국의 발전 경험 또는 중국 모델(中國模式)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俞可平, 2006; 龐中英, 2004).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성공함으로써 소프트 파워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 확산에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胡長生, 2009: 88; 黃琪軒, 2011: 29). 미국이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발전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IMF, 세계은행 및 WTO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를 통제하였고, 이러한 경제다자기구를 통해 세계 각국에 금융자유화, 무역자유화, 사유화 및 경제에 대한 관리 완화 등 신자유주의 모델의 핵심 내용을 강요하면서 세계 경제를 미국의 방식으로 꾸려나갔지만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모델이 일부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촉구한 부분까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개발도상국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금융위기의 발발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중국의 부상이 신자유주의 모델 확산에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黃琪軒, 2011: 32, 43-45).

V. 맺음말

이상으로 국제질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에 대한 중국 내 논의를 검토하였다. 국제질서와 중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매우 활발하게 토론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면서 중국의 대외전략의 변화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재차 논의의 지평이 넓어졌고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논조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중국 학자들은 여전히 ‘평화와 발전’이 이 시대의 양대 화두라는 시대관을 견지하고 있었다. 국제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에게 21세기 첫 20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이미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21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전면적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목표와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이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정세는 평화와 발전의 시대여야 한다. 중국 학자들의 시대관 인식은 국제정세에 대한 객관적 평가일 수도 있고, 중국의 강대국화 실현을 위한 당위적 평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국제질서의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에는 논조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표명해 온 공식입장에 따르면, 중국이 인식하는 이상적인 국제질서의 권력구조는 다극화다. 그런데 코소보사태 이후 중국에서는 다극화 실현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거나 매우 강한 패권국 미국이 주재하는 국제질서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학자들은 미국의 리더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심지어 쇠퇴하는 패권국의 행태가 국제질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하였다. 패권국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비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패권국의 행태가 중국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던 때와는 확실히 다른 입장이다. 이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증거이거나 일종의 자신감이 표현되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국가 간 관계 및 행태를 설명하는 기존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문제제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이론의 ‘중국학파’ 수립으로 통칭되는 중국 국제정치학계의 추세가 새롭지는 않다. ‘중국학파’ 수립을 주장하는 논의들은 주로 서구의 기존 이론들이 미국의 패권과 패권 유지를 설명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그 현상을 담은 이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매우 신중하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불완전한 극으로서 지역 강대국인지, 세계적 강대국인지를 논의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G2라는 외부의 평가를 그다지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나 중국의 발언

권 확대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될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기보다 실리적으로 국내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며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관점이 주류라는 평가이지만, 최근 체제적 차원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발언권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화폐시스템, 소프트 파워, 국제관계이론, 공공재 제공 등의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성공하면서, 중국의 국제적 역할과 발언권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자국의 발전 모델을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과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우려는 더욱 높아졌지만 이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입장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베이징 컨센서스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발전 모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미국이 신자유주의 모델이 전 세계에 천편일률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중국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이 신자유주의 모델 확산에 견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국제질서와 중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중국 내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전히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 다만, 중국의 국제적 역할과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에서는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일단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변화되었다. 중국의 부상은 이미 평화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부상이 세계 각국에게 어떠한 의미냐, 어떤 세계 이념을 동반할 것이냐의 문제이므로 지금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포용적 부상을 고려하자는 주장의 미심장하다(王義桅, 2011: 151).

국제질서 변화와 중국 대외전략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이전에 비해 논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이익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실히

제고시켰다.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면서 중국이 지켜내야 할 국가이익도 그 범위와 내용에서 확대·재구성되었다. 따라 중국이 지켜내야 할 국가이익이 확대·재구성되는 과정과 중국 내부의 담론 변화와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투고일: 2012년 11월 10일 | 심사일: 2012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1일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09. 『Beijing Consensus의 개념과 영향 분석』 http://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02494&hdnTopicDate=2009-04-13&hdnPage=1(검색일: 2009. 6. 20).
- 김애경. 2006. “중국의 개혁개방기 강대국화 담론.” 정재호 편.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 서울: 길.
- _____. 2010. “세계 금융위기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대외적 확산.” 『동서연구』 제22권 2호, 1-29.
- 高世军. 1999. “多極化-不可逆轉的跨世紀進程.” 『工人日報』(12월 2일).
- 郭樹永. 1999. “21世紀前葉中國外交大戰略芻議-對中國與美國, 國際秩序關係的重新思考.” 『太平洋學報』 2期, 91-96.
- 『南方周末』, 1999年 10月 1日.
- 唐學鵬. 2009. “中美對話強化G2模式.” 7月 27日 http://www.21cbh.com/HTML/2009-7-27/HTML_GAW6MLVSGD6G.html(검색일: 2009. 7. 29).
-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 第三卷.
- 龐中英. 2000. “在變化的世界上追求中國的地位.” 『世界經濟與政治』 1期, 33-34.
- _____. 2004. ““中國特徵的全球化”與“北京共識”.” 『當代世界與社會主義』 5期, 15-16.
- “峰會讓中國經濟有更多話語權.” 『中國經濟時報』(2007年 4月 7日).
- 石斌. 2006. “國際關係研究“中國化”問題的爭論.” <http://http.irchina.org/news/view.asp?id=1005>(검색일: 2006. 4. 8).
- 宋泓. 2011. “中國崛起與 國際秩序調整.” 『世界經濟與政治』 6期, 140-142.
- 梁凱音. 2009. “論中國擴展國際話語權的新思路.” 『國際論壇』 3號, 43-47.

- 楊浩勉. 2012. “中國走向全球大國和強國的國際關係理論準備.”『世界經濟與政治』8期, 149-155.
- 閻學通. 2005. “中國人看中國崛起.” <http://www.irchina.org/xueren/china/view.asp?id=466>(검색일: 2005. 5. 13).
- _____. 2011. “中國應承擔與自身地位匹配的責任.”『國際先驅導報』(5月 5日).
- 葉自成. 1999. “北約轟炸南聯盟的來龍去脈, 科索沃戰爭對國際社會的影響.”『北京青年報』, 4月 12日.
- _____. 2000. “中國實行大國外交勢在必行-關於中國外交戰略的幾點思考.”『世界經濟與政治』1期, 5-10.
- _____. 2003. 『春秋戰國時代的外交思想』. 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
- _____. 2004. “對中國多極化戰略的歷史與理論反思「①」.”『國際問題論壇』1期. <http://www.irchina.org/xueren/china/view.asp?id=752>(검색일: 2005. 2. 12).
- 吳挺. 2012. “中倡議中美不搞G2搞C2.”東方早報網. 5月 4日. http://www.news365.com.cn/xwzx/gjtp/201205/t20120504_390788.html.
- 王建輝. 2005. ““北京共識”: 發展價值觀的新境界.”『中南財經政法大學學報』1期, 15-19.
- 王廣謙. 2008. “中國崛起: “北京共識”與“中國模式”.”『財貿經濟』2期, 30-36.
- 王帆. 2008. “關於中國國際關係理論構建的幾點思考.”『國際論壇』3期, 50-55.
- 王福春. 1999. “科索沃戰爭: 冷戰後全球政治的分水嶺.”『科學時報』, 7月 1日.
- 王嘯. 2010. “國際話語權與中國國際形象的塑造.”『國際關係學院學報』6期, 60-67.
- 王嶼生. 2000. “浪漫主義理想和善良願望.”『世界知識』16期, 14-15.
- 王逸舟. 1999a. “負責任的大國角色.”『南方都市報』(12月 31日).
- _____. 1999b. “面向21世紀的中國外交: 三種需求的尋求及其平衡.”『戰略與管理』6期, 18-27.
- _____. 2012. “中國需要大力擴展“高邊疆”和提供國際公共產品.”『當代世界』6期, 16-18.
- 王義桅. 2011. “超越和平崛起 - 中國實施包容性崛起戰略的必要性與可能性.”『世界經濟與政治』8期, 140-148.
- 王緝思. 1998. “國際關係理論與中國外交研究.”資中蘊編『國際政治理論探索在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_____. 2012. “中國的國際環境為何趨於嚴峻.”『環球時報』(6月 13日).
- 『瞭望』. 2009年 3月 14日.
- 牛軍. 1999. “新中國外交的形成及其特徵.”『歷史研究』5期, 23-42.
- 牛鐵航. 2009. “論國際貨幣體系失衡及中國對策.”『南京社會科學』3期, 10-11.

- 俞可平. 2006. ““中國模式”: 經驗與鑒戒.” 俞可平, 黃平, 謝曙光 主編. 『中國模式與“北京共識”: 超越“華盛頓共識”』.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劉延棠. 2007. ““北京共識”的潛臺詞.” 『瞭望』(10月 15日).
- 俞邃. 1999. “認識多極化, 促進多極化.” 『當代世界』9期, 12-14.
- 李少軍. 2012. “論中國雙重身份的困境與應對.” 『世界經濟與政治』4期.
- 李義虎. 1999. “科索沃战争所带来的国际政治思考.” 『世界經濟與政治』7期, 16-21.
- 衛楊春. 2007. “理性看待“北京共識”.” 『文教資料』1月號, 213-214.
- 鄭永年·翁翠芬. 2010. “世界權力新格局中的中美關係.” 『國際關係學院學報』5期, 94-99.
- 張劍莉. 2004. “中國, 新的引力中心? — 兼評“北京共識”對抗“華盛頓共識”.” 『南風窗』7月 16日.
- 張國祚. 2011. “文化強國勢在必行.” 『瞭望』2號.
- 張睿壯. 2001. “重估中国外交所处的国际环境 — 和平與发展并非当代世界主题.” 『战略與管理』1期, 20.
- 張志剛. 2012. “戴秉国为何提中美由G2到C2.” 6月 14日. <http://observe.chinaaiiss.com/html/20126/14/a4f662.html>(검색일: 2012. 6. 15).
- 張輝. 2010. “21世紀初中國面臨的國際環境與外交戰略選擇.” 『國際問題研究』3期, 201-204.
-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2年 11月 8日.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65444/4429125.html>(검색일: 2011. 8. 25).
- 田春生. 2006. ““中國模式”: 如何理解-從制度轉型的視角.” 俞可平, 黃平, 謝曙光 主編. 『中國模式與“北京共識”: 超越“華盛頓共識”』.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程曉勇. 2012. “建國以來國家政治利益演變分析.” 『延安大學學報』4期, 13-14.
- 趙曉. 2004. “中國經驗及其普世意義—從“華盛頓共識”到“北京共識”.” 『文匯報』6月 14日.
- 朱耀斌. 2006. ““北京共識”: 對全球化背景下中國改革解釋力的分析.” 『湖南社會科學』6期, 101-104.
- “中美對話開啓中國‘強國外交’: G2再成世界焦點.” 『環球時報』(2009年 7月 28日).
- 陳德照. 2000. “關於世界多極化發展的幾個問題.” 『世界經濟與政治』6期, 61-64.
- 秦亞青. 2005. “國際關係理論的核心問題與中國學派生成.” 『中國社會科學』第3期.
- . 2006. “國際關係理論中國學派生成的可能和必然.” 『世界經濟與政治』第3期.
- 蔡珞珈. 2010. “新形勢下人民幣國際化問題探討.” 『商業時代』1期, 82.

- 焦世新·周建明. 2011. “美國是“負責任”的實力下降霸權?” 『世界經濟與政治』 12期, 135-160.
- 楚樹龍. 2012. “中美建新型關係, 障礙在美國.” 『環球時報』(3月 14日).
- 鄒東濤. 2006. ““華盛頓共識”, “北京共識”與中國獨特的發展道路.” 『宏觀經濟研究』 5期, 10-14.
- 沈丁立. 2009. “需冷靜權衡 ‘G2論’ 的利弊得失.” 『東方早報』(5月 22日).
- 馮昭奎. 2000. “潮流不会越来越弱, 只会越来越强.” 『世界知识』 5期, 12.
- 賀文萍. 2006. “構建中非歷史進程的新平臺-胡錦濤主席訪問非洲的戰略意義.” 『中國報道』 6期.
- 何方. 2000. “我为什么要出一本〈论和平與发展时代〉.” 『世界知识』 13期, 22.
- 胡長生. 2009. “中國模式軟實力: 從增長模式到發展模式.” 『中國井岡山幹部學院學報』 4期, 88-94.
- 黃琪軒. 2011. “另一個世界是可能的.” 『世界經濟與政治』 1期, 29-45.
- Bergsten, Fred. 2008. “A Partnership of Equals: How Washington Should Respond to China’s Economic Challenge.” *Foreign Affairs*, July/August.
- Economy, Elizabeth C. and Adam Segal. 2009. “The G-2 Mirage.” *Foreign Affairs* (May/June).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4946/elizabeth-c-economy-and-adam-segal/the-g-2-mirage>(검색일: 2010. 8. 7).
- Global Language Monitor. 2011. “The Rise of China Still Tops all Stories.” May 5. <http://www.languagemonitor.com/?s=rise+of+china+still+tops+all+stories> (검색일: 2012. 6. 15).
- Goldstein, Avery. 2001. “The Diplomacy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168, September.
- Kim, Samuel S. 1994. “China’s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omas W. Robinson & David Shambaugh ed., *Chinese Foreign Policy-Theory & Practice*. Oxford: Oxford Press.
- Kitissou, Marcel. 2007. *Africa in China’s Global Strategy*. London: Adonis Abbey Publishers Ltd.
- Kurlantzick, Joshua. 2007.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ew Research Center. 2011. “U.S. Status as World’s Superpower Challenged by Rise of China, U.S. Favorability Ratings Remain Positive,” July 13. <http://>

- pewresearch.org/pubs/2059/-superpower-china-us-image-abroad-afghanistan-terrorism (검색일: 2012. 9. 20).
- Thompson, Drew. 2005. "China's Soft Power in Africa: From the 'Beijing Consensus' to Health Diplomacy." *China Brief* V, October.
- Wang, Hongying. 2000.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43(3), May/June.
- Wang, Jisi. 1994.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A Chinese Perspective." In Thomas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an, Xuetong. 2011a. "The Source of Chinese Conduct." March 28, 2011,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xyan1/English>(검색일: 2011. 9. 30).
- _____. 2011b. "How Assertive Should a Great Power Be?" *New York Times*. March 31.
- Zoellick, Robert B. and Yifu Lin. 2009. "Recovery Rides on The 'G-2'." *The Washington Post*. March 6.

Abstract

Reviewing the Discourses of International Order Shift and China's Foreign Policy Strategies: Based on Domestic Debates within China

Aekyung Kim Myongji College

This article aims at reviewing the discourses of international order shift and of China's strategies with foreign policy, based on domestic debates within China. While the rise of China's status triggered debates o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China's foreign policy strategies, by the early 1990s to early 2000s, they became topics of heated discussion with a focus on determining the strategic changes in China's foreign polic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broadened range of debate and the changing opinions of scholars began to be found in some issues. Despite their unwillingness to accept G2 in its original concept, many experts agree on the shift in the power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It is evident that scholar's debates have since changed from those of discussing China'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order, to those of discussing the appropriate role of China. As for the expansion of China's development model, scholars' reviews have been generally negative. They have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doubting the existence of a development model for China, a collective doubt which has come to be known as the "Beijing Consensus." However, scholars in China have criticized that the rise of China has only played the role of 'checks and balances' in the expans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model, "Washington Consensus," which was monopolized by the United States.

Key Word | international order, foreign strategy, discourse, national interests, Beijing Consensus

